

4·3과 재일 제주인

김 창 후 (제주4·3연구소장)

들어가는 말

최근 재일 제주인에 대한 관심이 여러 측면에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재일 제주인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요원한 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4·3과 재일 제주인'을 주제로 한 연구는 더 어려운 실정이 되고 말았다.

사실, 재일 제주인은 일제강점기인 1922년 제주도와 오사카 간에 직항로가 생겨 제주도민들이 대거 노동품을 팔러 일본으로 건너가기 시작한 이후부터 해방 시기까지, 그리고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파면 솟아나는 황금연못이었다. 지금도 자치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거나, 큰 사업을 벌이게 되면 먼저 일본을 찾고, 일본의 제주도민 단체들을 찾아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해달라고 부탁하곤 한다.

1960년대 그 어려웠던 시절, 재일 제주인들이 입던 헌옷가지들을 보내면 고맙게 받아 입어본 적이 있는 필자도 얼마 전까지는 재일 제주인들은 그런 경제적인 보호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4·3 조사를 하고, 추도회를 열고, 교류를 하며 일본을 왕래하는 지난 20년 동안 그런 필자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나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민단, 총련,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민족교육, 민족학교, 북송사업(혹은 귀국사업) 등등 이런 용어들도 1990년대 초 재일 제주인들의 항일운동을 연구하고, 4·3을 연구하며 지금까지 조금씩 배워 알게 된 것들이다. 이런 나의 잘못은 우선 우리 세대에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나라를 빼앗은 식민지 종주국'으로만 '감정적'으로 교육한 정부에 있다. 일본은 물론 재일 한국인¹⁾ 혹은 재일 제주인²⁾에 대해 달리 알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공하고 고향에 배품을 줄 수 있는 재일 제주인은 추정 약 15만 명의 재일 제주인 중 몇이 안 된다. 과거 친척들에게 입던 옷이나마 보내고, 굴요목을 보내 제주도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고향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들 모두가 재벌이고, 성공한 재일 제주인은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 크게 성공한 제주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악수했던 1세 할아버지의 거칠던 손을 기억한다. 그때 그 1세 할아버지가 4·3을 피해 일본으로 왔던 행적을 듣고, 그 후 일본에서 도피자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시련들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몰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새롭다.

일본의 재일 제주인 사회를 조금 알게 될 무렵, 일본에는 4·3 경험자들, 특히 남로당이나 무장대에서 간부급으로 활동했던 분들도 많이 생존해 계시다는 풍문 아닌 풍문을 듣고 연구 목적에 기대에 찼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풍문은 말 그대로 풍문이었고, 설사 그런 분이 계셔도 입을 열지 않았다. 요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연구는 물론 재

1) '재일 한국인'이라는 용어는 사실 '재일동포', 혹은 '재일 한국조선인'으로 표현해야 올바를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 여러 용어를 혼용했다.

2) '재일 제주인'이라는 용어도 '재일 제주도 출신자'와 혼용했다. 일본에 제일 많이 거주하는 재일동포는 경상도 출신자들이다. 그럼 이들은 '재일 경상인'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부를 수 있을까?

일 제주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척됐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의 재일 한국인 사회에는 민단과 총련이라는 이질적인 조직이 존재해 '4·3과 재일 제주인'이라는 주제의 연구는 아직도 요원한 형편이다. 그래서 이 글은 부족한대로 '4·3과 재일 제주인'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연구됐던 글들과 일본에서의 4·3 진상규명사업, 추도사업 등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려 한다.

일본 이주의 시작

일제는 1922년 12월에 조선과 일본 간에 자유도항제를 실시했다. 이어 1923년 12월 15일에는 제주와 오사카 간의 직항로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수탈로 생활이 어려웠던 제주도민들은 대거 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던 일본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1923년 당시 제주도의 인구는 209,925명이었다. 그러나 정기항로의 개설 이후에는 점차 감소해 1930년에는 199,577명으로 인구의 자연증가율에도 못 미치고 있다. 반면 일본에 잔류자수는 증가해 1926년에는 28,144명이었던 것이 1934년에는 가장 많아져서 50,045명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 총인구의 1/4에 이르는 숫자로 거의 모든 가구에서 1명은 일본에서 노동품을 팔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표 1> 濟州人の 日本 渡航者と 歸還者 數³⁾

(단위: 명)

연 도	도 항 자			귀 환 자			잔류자 누 계
	총 수	남	여	총 수	남	여	
1926	15,862	11,742	4,120	13,500	10,029	3,471	28,144
1927	19,224	14,479	4,745	16,863	12,015	4,848	30,305
1928	16,762	11,745	5,017	14,703	10,100	4,603	23,564
1929	20,418	15,519	4,903	17,660	13,326	4,334	35,322
1930	17,890	12,029	5,861	21,416	15,175	6,251	31,786
1931	18,922	11,635	7,287	17,685	12,512	5,533	33,023
1932	21,409	11,695	9,719	18,307	10,382	7,925	36,125
1933	29,208	15,723	13,485	18,062	12,356	5,706	47,271
1934	16,904	9,060	7,844	14,130	8,115	6,015	50,045
1935	9,484	4,327	5,157	11,161	5,986	5,175	48,368
1936	9,190	4,739	4,451	11,095	6,037	5,058	46,463

이렇게 일본으로 출가한 제주인들은 제주-오사카 항로의 종착지인 오사카 지역에 자연스럽게 집단거주했다. 특히 이들은 오사카의 이카이노(猪飼野, 현재 오사카의 이쿠노구-生野區- 지역)에 몰려 살기 시작했는데, 이곳은 지금도 재일 제주인들이 가장 많이 거

3) 자료 : 제주도청, 《濟州島勢要覽》, 1937년, p. 20.

주하고, 일본에서 제주도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주자들의 일본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일본인들은 조선인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았다. 어떤 하숙집에는 ‘개나 조선인은 사절함’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기도 했다. 어렵게 집은 얻은 사람들은 일본인들은 기피하는 우산제조공장, 메리야스공장, 유리공장, 고무공장, 철공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까맣게 되도록 일했다.’ ‘노동시간은 길고 임금은 적었지만’⁴⁾ 이처럼 나쁜 조건이 아니면 조선인을 고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사카에 이주한 제주인은 다른 지방 출신자들보다 그 수가 월등히 많았다. 1924년 오사카부 조사에 의하면 오사카부에 거주하는 조선인 60% 이상이 제주인이었다. 이들은 영세가내기업이 많은 이카이노 지역에 집단거주하며 소규모 공장의 직공이나 인부로 일했다.

<표2> 오사카부 제주(大阪府 在住) 조선인 출신지별 비율표⁵⁾

(단위: 명)

출신지	인수	출신지	인수	출신지	인수	출신지	인수	출신지	인수
제주도	609	경 남	85	충 북	3	황해도	-	함 남	3
전 남	192	경 북	55	경기도	18	평 남	3	함 북	2
전 북	9	충 남	17	강원도	4	평 북	-	계	1,000

이렇게 제주인들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본에 와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고향의 가난한 육친들을 위해 송금했다.

<표3> 제주 출신 도향자 送金高表⁶⁾

(단위 : 원)

연 도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송금액	956,571	1,289,714	1,243,301	799,180	715,012	685,155
일인당	31.36	39.54	35.20	25.14	21.65	18.96
연 도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송금액	857,919	1,053,940	1,006,985	1,087,518	1,073,870	1,470,703
일인당	29.39	21.05	20.88	23.40	23.37	32.01

위 표에서 보듯이 1925년부터 1933년까지 8개년 간 고향에 보낸 송금액은 연평균 100

4) 金贊汀, 『異邦人 君代丸 타고』, 일본 岩波書店, 1985, 60~66쪽

5) 자료 : 조선총독부, 『阪神・京浜 지방의 조선인 노동자』, 1924, 7.

대관부청 사회과 직업보도회가 1924년 1,000명의 조선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6) 자료 : 제주도청, 『제주도세 요람』, 1937, 24~25쪽

제주도청, 『제주도세 요람』, 1939, 17쪽에서 작성

* 이 표는 우편국을 경유한 송금이다. 개인이 직접 가지고 오는 금액을 합하면 이들이 일본에서 직접 벌어들인 돈의 액수는 더 많아질 것이다.

만원으로, 송금총액은 730여 만원에 달했다. 이것은 1인당 한 해에 약 40원을 송금한 것으로 이들이 송금한 돈은 당시 제주도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다.

일본에서의 항일운동

재일 제주인들의 항일의식은 유학생들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1912년 10월 27일 <조선유학생 학우회>가 신익회를 회장으로 결성되었는데 이때 제주도 출신으로 와세다 대학에 다니던 김명식이 간사부장으로 임명됐다. 김명식은 그 후 일본에서는 물론 제주도에서 항일운동의 대부로 활동했다.

1932년 8월, 일제의 고등법원 검사국은 「제주도의 치안상황」 7이란 보고서에서 제주인들의 오사카에서의 항일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인은 약 4만 명에 이르고 매년 왕복자 또한 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도항자 대부분은 오사카 지방에 거주하며 (중략) 현재 오사카 방면에서 사상운동에 종사하는 제주도 출신자는 약 3백 명에 달하고, 혹은 통신뉴스로, 혹은 출판물 뉴스로 불온사상을 유포하여 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중략) 산북지방 출신 요시찰인 요주의 인물은 80여 명이고, 산남지방 출신은 25,6명을 넘어서고 있다.

일제가 1932년 8월 현재 오사카 지방에서 활동하는 제주 출신 항일운동가를 3백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오사카 지방은 이들의 주요 활동무대였다. 고순흠은 1920년부터 무정부주의자로 활동했고, 1927년 신간회가 탄생하자 김문준, 김달준, 김용해, 홍양명이 활동했다. 한편 당시 항일운동가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민족해방운동의 한 방편으로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제주도 출신자들도 일본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일본공산당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으로 투쟁했다.

일본에서 활동한 제주도 출신 항일운동가 중 단연 돋보이는 사람은 김문준이었다. 김문준은 1927년 도일한 후 오사카지역의 노동운동에 투신하여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중앙위원을 역임하며 오사카 지방 조선인 노동운동의 최고 지도자로 활동했다. 그는 조몽구, 현호진, 김용해들과 더불어 재일조선노동 오사카조선노동조합을 지도했다. 김문준의 활동을 한 일본인 학자는 “…… 그 첨예한 이론가로서의 명성은 오사카 조선인 노동계에 중요한 위치를 점했다. …… 무정부주의운동은 이미 쇠퇴하여 고순흠의 시대는 가고 점점 김문준의 천하로 바뀌어 극좌운동의 전성시대를 현출함에 이르렀다.”⁷⁾

김문준은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화학노조 오사카지부에서 활동하던 1930년 6월 동료들과 함께 일제에 검거됐다. 그는 그 후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위반 혐의로 3년6월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출옥 후 김문준은 『민중시보』를 1935년 6월 15일에 창간했다. 민중시보는 그 후 월 2회씩, 1936년부터는 월 3회씩 발간되다 그해 9월 20일 제27호를 마지막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폐간됐다.

민중시보는 창간 이래, 민족운동의 기관지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특히 신문기사에 의한 선전활동과 그 이면 활동을 통하여 재오사카 운동가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을 민족해방운동전선으로 결집시켜 나갔다. 그러나 앞날은 순탄치 못해 일제의 탄압은 끝이 없었

7)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사상월보』 제2권 제5호, 1932, 11~12쪽

8) 坪江油二, 『조선민족독립운동비사』, 일본노동통신사, 도쿄, 1959, 280~290쪽

고, 편집인 겸 발행인이었던 김문준이 1936년 5월 26일 폐결핵이 악화되어 도근산(刀根山) 요양소에서 43세를 일기로 별세하자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었다.

재일 제주인들의 일본에서의 항일운동은 이 외에도 소규모 그룹으로, 혹은 개인별로 1945년 우리 민족이 해방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는 1995년에 출판된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이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해방과 귀환

해방이 되자 제주도는 급격한 인구이동 상황이 초래됐다. 단기간 주둔했던 6만여 명의 일본군이 일본 본토로 철수하자 일본 등지에 나가 있던 6만여 명의 제주도 사람들이 귀환했다.

당시의 상황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잘 알려주고 있다.⁹⁾

“일본에 진출했던 젊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 왔을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농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전형적인 노동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마을 외부에 노출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이미 농촌사회의 전통적인 행동양식이나 의식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다. 그들은 일본 노동시장에서 저임금과 민족적 차별을 경험했던 자들로 일정하게 민족의식과 사회의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해방된 조국에는 이들을 수용할 만한 공장이나 일터가 없었다. 실업률도 증가했다. 이들은 곧 심각한 경제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특히 8·15 직후에 귀환자의 반입물품 제한과 일본과의 물자교역 불법화는 그동안 일본 오사가 중심의 노동시장 생활권을 유지해왔던 출가노동자들의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주었다.

도쿄에 있던 맥아더 사령부(필자주: GHQ 연합국군 최고사령부)는 종전 직후 귀환조선인의 휴대물품과 금액을 철저히 제한했다. GHQ는 1945년 11월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앞으로 자유롭게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소지품 외에 천 엔(담배 20갑에 해당되는 돈)만 소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광산과 공장에서 낮은 임금과 고된 노동으로 벌어들인 조선인 노동자의 다른 모든 재산은 그냥 남겨 놓아야만 했다.

8·15 이전 공산품의 40% 가량을 일본에서 구입해오던 제주도 사회는 일본과의 정기 여객선 뱃길이 끊기고 반입물품 제한과 대일 교역마저 통제를 받게 되자 심한 생필품의 부족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되자 제주 도내 곳곳에서 귀환자도 실어 나르고 물품도 반입하기 위해 20~50t 급의 어선들이 현해탄을 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물품반입 행위를 불법이라 하여 경찰에서 단속하면서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자유신문』(1946.12.19)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제주도에 들어오는 물자는 간상배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일본을 위시한 각지에서 돌아오는 전재(戰災)동포의 물건이 태반이라 한다. 수십 년 간 고혈을 기울여 저축한 재산을 그대로 버릴 수 없는 재일동포들은 할 일 없이 물건을 사가지고 외국관헌의 눈을 속여가며 본국을 찾아 우선 제주도로 들어오는 것이라 한다. 현재 법령이 그들의 재산반입을 아직 인정치 않는 이때, 그들이 이와 같은

9)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71쪽

밀수입을 하게 됨을 막을 도리가 없는 일이다. 당국에서 이와 같은 재일 귀환동포의 눈물 나는 노력까지 분별없이 방지한다면 결국은 외국을 이롭게 하는 결과밖에 안될 것으로 민중들은 경찰당국의 현명한 조치를 갈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모리배들이 끼어들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모리배들은 미군정 관리, 경찰 간부 등과 결탁, 밀수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압수된 물품을 빼내어 잇속을 챙겼다. 급기야 이 문제는 『제주신보』(1947.1.28)와 『동아일보』(1947.2.5)가 ‘모리배 천하인가?’ ‘모리천하 제주도’란 제목 아래 대서특필할 정도로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4·3과 밀항, 재일 제주인 사회의 형성

1947년 3월 1일, 관덕정 마당에서 경찰에 의한 첫 발포사건이 일어나면서 4·3이 시작됐다. 미군정은 그 후 3·10총파업을 무력화시키면서 우익세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도지사를 극우파 유해진으로 바꾸고, 경찰청장을 교체했다. 유해진 지사는 가뜩이나 굶주리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는 대신 정치적 반대파의 탄압에만 몰두했다. 그렇지 않아도 적응하기 힘들었던 제주도 사회가 이 처럼 혼란에 빠지자 귀환자들은 다시 일본으로 도항하기 시작했다.

해방 당시 2백만 명 이상이 되었던 재일 한국인들은 해방 후 1년 동안 1백50만 명 가량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오사카에는 1942년 41만 명을 정점으로 1940년대에는 30만~40만 명의 재일 한국인들이 살았다. 그런데 1946년 3월 16일, GHQ는 한국으로 귀환한 한국인에 대해서는 일본으로의 재입국을 엄격히 금한다고 일본 정부에 지령을 내렸다. 결국 GHQ 점령기 일본으로의 도항은 ‘밀항’이라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1949년 11월~1950년 6월 사이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사람수는 501명에 불과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한국인 밀항자가 일본으로 건너갔을까? 최근에 이에 대해 ‘재일 제주인과 밀항’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물을 발표한 일본학자의 글을 인용해보자.¹⁰⁾

<표4> 밀입국 조선인 검거현황¹¹⁾

년도	상륙지 검거 인원	도주 인정 인원	밀입국자 합계	상륙지 검거율	국내 검거 인원
1946(4~12월)	17,733	3,683	21,416	83%	1,374
1947	5,190	1,467	6,657	78%	716
1948	6,160	2,046	8,206	75%	460
1949	6,324	2,710	9,034	70%	1,249

10) 후지나가 다케시, 「재일 제주인과 ‘밀항’ - ‘재일 제주도 출신자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의 조사에서」, 『기억의 구술과 역사-43의 경험과 재일 제주인, 그리고 한국현대사』 제주43 제62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제주43연구소, 2010.10.8~10.9, 56쪽

11) 小島義雄, 「最近の密航状況とその取締に津について」, 『警察時報』 7~11, 1952. 11, 97쪽.

1950	1,572	1,170	2,742	57%	534
1951	2,410	1,143	3,553	68%	363

<표4>는 1946년 4월부터 1951년까지의 한국인 밀입국 검거상황을 관헌당국이 정리한 것인데, 1946년 4~12월의 9개월간 상륙지에서 검거된 이가 17,733명, 검거자의 진술에 의한 도주자가 3,683명, 합하면 21,416명의 밀입국자가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미검거자가 검거자의 두세 배” 라고도 하고, “일본의 경찰에 잡히는 것은 세 번에 한 번꼴, 또는 네 번에 한 번꼴”이라고도 하고, 나아가 “밀항배의 1할밖에 검거되지 않는다” 고도 일컬어지고 있어 실제 밀항자수는 4~5만 명 이상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면 이 시기에 제주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본으로 건너갔을까? 제주인들의 도항에 대해서는 무라카미 나오코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훌륭한 연구업적을 남겼다.¹²⁾ 그러나 무라카미씨의 연구도 파편적이어서 밀항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¹³⁾ 아마 확보된 1차 자료의 부족이 주원일일 것이다.

일본의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출입국 관리와 그 실태, 소화 46년판』(1971, 78쪽)에서 1952년~1969년까지의 ‘불법입국자 검거수’를 정리했다. 이 자료를 보면, 한국인 검거자수가 1952년 2,628명을 정점으로 해서 1958년에 1,457명으로 1천 명대로 떨어지더니 1966년에는 767명으로 1천 명 이하로 떨어졌고(후지나가씨는 이 현상은 전년도인 1965년에 체결된 것은 한일기본조약의 영향으로 보았다), 1969년에는 671명으로 더욱 떨어졌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970년~74년의 출신지별 ‘불법입국자’를 정리한 <표5>의 결과다.(후지나가 다케시, 58쪽)

<표5> 한국인 불법 입국자의 출신지(1970~1974)¹⁴⁾

지역 년	1970	1971	1972	1973	1974	합계	비율
제주도	93	90	154	198	112	608	82.2%

12) 伊地知紀子村上尚子, 「解放 直後 濟州島の 人びとの 移動と 生活史-在日 濟州島 出身者の 語りから-」, 『日本帝國をめぐる 人口移動の 國際社會學』, 不二出版, 2008

村上尚子, 「43 당시 일본 에히메로 건너간 사람들에 관한 영연방 일본점령군 자료」, 『43과 역사』 제7호, 제주43연구소, 2007

13) 村上尚子は 「43 당시 일본 에히메로 건너간 사람들에 관한 영연방 일본점령군 자료」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이 자료의 내용은 1948년 10월 5일부터 10월 16일 사이에 에이메현에서 ‘불법입국자’로 검거된 조선인 명부 290명분 및 그들의 ‘불법입국’에 관한 보고와 분석이다. 명부 290명 중 신고된 본적지로 보아 제주도 출신자(특히 한림면 사람들이 가장 많아 196명이었음)는 285명이었다. 도항 시기가 제주도에서는 43의 와중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 지금까지 자료 부족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43 시기 제주도민의 도일 상황에 대해 일부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종래의 연구(『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125~126쪽)에서는 1948년부터 1949년에 도일한 제주도민은 거의 없었다고 되어 있었다.

14) 『出入國管理—その 現況と課題—』, 法務省 入國管理局, 1975, 122쪽.

경상남도		10	18	16	5	49	6.6%
경상북도	3				3	6	0.8%
전라남도	12		2	4	4	22	3.0%
전라북도		1		6		7	0.9%
충청남도		4				4	0.5%
경기도			9		3	12	1.6%
기타	8	2	1	17	4	32	4.3%
합계	116	77	184	232	131	740	

위 표에 따르면 5년간 총 740명의 검거자 중에서 제주도 출신자는 608명으로 실로 전체의 82.2%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한국인 밀항자의 수는 점차 줄었는데 반해 제주도 사람들은 여전히 해방 후 3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최근까지도 자료 부족으로 제주인들의 밀항에 대해서는 파편적인 연구 물밖에 생산을 못하고, 4·3 시기 어느 정도의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을까 의문인 가운데, 문경수(리츠메이칸대학교)는 「4·3사건과 재일 한국인」¹⁵⁾이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다.

“GHQ의 기록에 의하면 밀입국자수는 46년에 약 2만2천 명으로 그 중 98%가 한국인들이었다. 47년 5월에는 외국인등록법이 공포되고 밀입국자수는 6,630명으로 감소되지만 48년에는 다시 8,408명으로 늘어나고 49년에는 9,437명에 달했다. 분명히 4·3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밀입국했다고 GHQ가 파악한 숫자들이고 그중 70%는 체포되고 있다. 따라서 GHQ의 기록에 의하면 48~49년 기간에 대충 4천~5천 명의 한국인이 밀입국에 성공한 셈이다. (중략)

이 자료 이외에 밀항자의 규모를 미루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1952년) 후의 외국인 등록 통계를 들 수 있다. 외국인 등록 통계가 정비된 53년의 재일 한국인수는 약 55만6천 명으로서 그 중 제주도 출신자는 약 6만4천 명이었다.

그런데 59년 4월 시점의 재일 한국인수는 60만7천 명으로 약 9%가 증가한데 비해 제주도 출신자는 8만5천 명으로 약 33%(2만1천 명) 증가추세를 보여 전체 인구증가율보다 24%나 초과했다. 이 24%를 인구수치로 환산하면 약 1만5천 명이 되며, 이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점령기의 밀항자로서 강화조약 체결 후 새로 등록증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로 미루어 보면 4·3을 전후한 시기 대략 5천~1만 명의 제주인이 일본에 밀항한 것으로 짐작된다. 59년의 8만5천 명에 이르는 재일 제주인 가운데 5만5천 명이 오사카에 살고, 밀항자의 대다수도 오사카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경수는 이 글에서 불완전한대로 2001년 당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4·3으로 5천~1만 명의 제주인이 일본으로 도항, 혹은 재도항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문경수는 그 후 『제주도 4·3사건』¹⁶⁾에서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125쪽)에

15) 문경수, 「4·3사건과 재일 한국인」, 『4·3과 역사』 창간호, 2001, 제주4·3연구소, 10~11쪽

16) 문경수, 『제주도 4·3사건』, 平凡社, 2008

서 김민주가 “제주 청년 3천 명 가량이 해방 후 일본으로 건너왔는데, 주로 1947년의 일이다. 사태 발생 이후인 48년이나 49년에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사람들은 거의 거짓말일 것이다”고 주장한 사실을 참고로 5천~1만 명 설을 신지 않고, 김민주의 증언을 실었다. 그렇지만 최근 필자와의 대화에서도 문경수는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이 될 사실은 아니나 4·3 시기 일본으로 밀항한 제주인은 5천~1만 명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문경수는 「4·3사건과 재일 제주인」에서, “어쨌든 4·3 이후 50년대에 걸쳐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 혹은 5분의 1이 되는 제주인이 일본에 살고 있었던 셈이며 4·3의 진상규명은 일본에서의 실태 파악이 없이는 완결되지 못할 것이다”고 했는데, 이 말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한편, 제주인들은 일본으로 밀항할 때 주로 ‘제주-> 부산-> 대마도-> 규슈 지역’ 코스를 택하게 되는데, 1950년 직후 대마도에서 벌어졌던 밀수와 밀항에 관련된 사항은 유아사 가츠에(湯淺克衛)가 1952년에 발표한 『對馬』¹⁷⁾라는 책에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다.

4·3과 한신교육투쟁

문경수는 「4·3사건과 재일 제주인」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견해를 밝혔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4·3과 GHQ의 관계로, 아직까지 자료 부족으로 GHQ가 4·3에 직접 개입한 정황은 드러나 있지 않으나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던 맥아더가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대비해 일본에서도 한신교육투쟁사건(이하, ‘한신사건’)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 증거는 GHQ가 점령기간 내내 일본에서는 간접통치 방식을 써왔는데 유독 한신사건에서만 ‘비상사태’를 적용하는 등 강경책을 택한 것은 단순히 재일 한국인 정책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1948년 4월 당시 냉전이 세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극동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의도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사실, 논리적으로 볼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견해이다. 4·3에 대한 미국 책임을 묻는 국내의 지금까지 연구가 거의 주한미군정의 책임을 규명하려 노력했던 것이라면, 이 견해는 한신교육투쟁사건을 매개로 하여 그 범위를 일본에 사령부를 두고 있던 GHQ까지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경수의 글을 참고로 한신사건을 정리하면 이렇다. 한신사건은 해방 직후 조련(재일 조선인총연맹, 1945년 10월 결성) 등의 재일 한국인 단체가 추진한 민족교육사업에 대해 GHQ와 일본정부가 당시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는 형식상 일본국민이라는 것을 빌미로 이를 부정하고 탄압한 사건이다.

8·15 직후부터 조련 등 재일 한국인 단체는 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중시하여 일본의 전국 각지에 민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했다. 1947년 10월 현재, 초등학교 541개교(학생수 5만7,961명, 교원수 1,250명), 중등학교 7개교(학생수 2,760명, 교원수 95명), 기타 청년교육을 위한 고등학교원이나 청년학원이 30개교가 있어 민족교육의 체계가 잡혀져 있었

17) 유아사 가츠에(湯淺克衛), 『對馬』, 出版東京, 1952.

이 책의 일부 내용은 김창후의 『대마도를 떠도는 43년』(2010, 각)에 수록되어 있다.

다.

GHQ와 일본 문부성은 당초 이러한 재일 한국인의 민족교육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 다. 그러나 1947년 10월 GHQ 민간정보국이 민족학교를 사실상 부인하는 지령을 일본 정부에 내렸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1948년에 들어서자 민족학교를 폐쇄하고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도 일본정부가 허가한 소·중학교에서 '과외로 할 것' 이외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재일 한국인들에게는 일제시대의 황민화교육의 재현으로 인식됐다. 곧 이에 항의하는 한국인과 당국의 충돌이 각지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반대운동이 가장 치 열했던 곳은 고베와 오사카였다. 고베에서는 1948년 4월 24일 비상사태가 공포되고 같 은 달 27일까지 1,664명이 검거됐다. 오사카에서는 26일 학교 폐쇄에 항의하는 3만 명의 시위대에 경찰이 발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때 16살이었던 김태일이 사망하고 27명 이 부상당했다.

이 한신사건은 GHQ의 점령정책의 기초가 일본의 비군사화·민주화로부터 경제부흥 과 반공정책으로 변화해가는 속에서 재일 한국인의 운동을 억압하거나, 혹은 일본인과 재일 한국인의 사회적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 왔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신사건에 적용된 '비상사태'는 간접통치방식을 기본으 로 하는 미군의 일본점령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 적용된 것이었다. 여기서 문경수는 48년 4월이라는 시점에서 GHQ가 그러한 강경책을 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재일 한국인 정책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 증거 로 문경수는 GHQ의 4월 10일자 한 문서¹⁸⁾에서, 단독선거 이전에 남한에서 대규모 반 대운동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재일 한국인 가운데에서도 특히 오사카지구에 거주하는 이단분자는 남한에서의 대규모 폭동과 연대해서 재일 점령군을 곤란에 빠뜨리게 할 목 적으로 시위운동을 벌이고 폭동을 일으키고, 다른 지역의 민중운동을 지원할지도 모른 다"고 경계한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GHQ 외교국의 시볼드 외교국장(단독선거 문제 와 관련하여 민족학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특별히 촉구한 것은 미국성 계열의 GHQ 외교국이었다)은 1948년 4월 27일 GHQ 참모본부에 보낸 문서¹⁹⁾에서, "이들 소 동"이 일본인과 한국인으로 구성된 공산주의자와 결탁하고 있고, 소련은 단독선거에 영 향을 끼치기 위해 한국과 기타 지역에서의 선전 목적에 이들 소동을 이용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적어도 남한의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조치가 즉각 강구돼야 한다"고 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위 문건을 보면 GHQ가 4·3을 직접 언급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미국무성과 GHQ가 1948년 5월 10일의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의식해서 '남한에서의 대규모의 폭동'이라고 했을 때, 제주도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점과 관련해서 GHQ가 '특히 오사카지구에 거주하는 이단분자'를 언급한 것도 주목할 점인데, 이런 몇 가지 사 실들이 4·3과 한신사건을 GHQ가 일괄적으로 통제한 증거가 아니냐고 문경수는 묻고 있는 것이다.

GHQ는 이듬해 9월, 재일 한국인 최대의 민족단체였던 조련을 해산했다.

18) GHQ, FEC, Staff Study Operation, "STRETCHABLE, Edition 1," 10 April 1948, MacArthur Memorial

19) DS(W.J.Sebald to C/S, CHECK SHEET, "Korean Disturbance in Kobe And Other Places," 27 April 1948, POLAD)

일본에서의 4·3 추도행사

4·3은 재일 한국인 사회, 특히 재일 제주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4·3 발발을 전후한 2년 동안 재일 한국인들은 4·3에 큰 관심을 보였다. 최근 무라카미 나오코의 연구²⁰⁾를 보면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재일 한국인이 간행했던 신문과 민족단체 기관지에 보도된 4·3 관련 기사는 400건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4·3 당시에는 재일 한국인들이 4·3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당시에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보도규제 등으로 단편적인 정보밖에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평양 발신의 외전(外電)도 이용하면서 제주도에서 일어난 군경에 의한 학살 상황을 전해주었다. 그 일부 보도를 보자.

조련과 그 산하 조선인 단체는 1948년 2월 말 남조선 지역에서 UN 감시하의 선거 실시가 결정되자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해방신문』(1949.6.9)은 조선인 단체 간부 가족이 토벌대에게 학살된 사실을 크게 보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러 신문은 1949년 1~2월, 제주도에서 토벌대에 의한 초토화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 제주도 출신자들의 집주지역에서는 화북, 조천, 북촌, 신촌, 함덕, 한림, 삼양 등 출신 마을 단위로 '인민학살 반대 추도회'가 열리자 이를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커져가서 조련 각 지부에서는 이것은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동포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추도인민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그 후, 재일 한국인 사회에서 4·3에 대한 조직적인 활동과 논의는 사라지고 말았다. 김동일의 표현²¹⁾처럼 4·3에 직간접으로 관계됐던 사람들도 '냉장고 속의 언 고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우는 김동일만이 아니었다. 무라카미 나오코는 재일 한국인 사회에서 언급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같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침묵을 강요하는, 눈에 보이는 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예를 들어 1959년에는 제주도 출신자들이 8만5천 명이나 일본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3이 공식적으로 논해지는 일은 거의 없었고,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호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왜 그랬던 것일까. 제주도 출신자들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4·3을 이야기한 적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같은 마을 출신자들 사이에서도 4·3에 대한 감점과 생각이 심각하게 다른 경우도 있다. 또한 당사자인 경우, 고문이나 학살현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도려내듯 아팠을 것이고, 살아갈 수 없을 듯한 기억은 억지로 가슴 깊은 곳에 밀어 넣고 잊으려고 억지라도 애를 쓰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스스로 기억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3 시기 일본으로 건너온 재일 제주인들은 일본에서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불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심적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도일 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의무교육을 위해 출입국관리국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자수'를 해야 했지만, 타향에서 '존재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단을 자연히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로부터 '도피자'의 낙인이 찍히고, 또 부모와 동지들을 남겨두고 왔다는 자책감 등으로부터 스스로 '도피자'

20) 村上尚子, 「프란게 문고 내의 재일조선인 발행 신문에 나타난 제주43 인식」, 『43과 역사』 제5호, 제주43연구소, 2005년

21) 김창후, 『자유를 찾아서-김동일의 역세와 해바라기의 세월』, 선인, 2008

로서의 심적 부담을 안고 지내오면서 김시종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국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본국에서의 향에서 '존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는 군사정권이 4·3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고 하며 토벌대에게 살해된 모든 희생자들을 '폭도', 또는 '빨갱이'로 간주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195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전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민들의 봉기는 높이 평가그리고도, 남로당 지도터 스전략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본국서 김시 민단과 총련이라는 재일 한국·재일 한국·로 하여금 4·3에 대한 언급과 평가를 피하도록도록도록도개인들이 4·3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본국의 친척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4·3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식인들이었다. 그중 문학 분야의 김석범이 두드러졌다. 김석범은 1951년 잡지 『조선평론』 창간호(1951.12)에 박통이라는 필명으로 제주도의 학살을 그린 단편소설 「1949년경의 일지에서: “죽음의 산”의 한 절(節)에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1957년에는 「간수 박서방」과 「까마귀의 죽음」을 발표했다. 김석범은 그 후에도 장편 「화산도」를 쓰면서 4·3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본과 재일 한국·조선인 사회에 알렸다.

<도쿄와 오사카의 4·3 추도행사>

도쿄에서 4·3추도행사는 1988년 '제주도4·3사건 40주년 추도강연회'로부터 시작됐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4·3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재일 제주인만의 4·3 추도행사에서, 지금은 재일 한국인 전반 및 일본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추도행사로 탈바꿈했다.

4·3 추도사업의 시작은 1985년에 결성된 <탐라연구회>와 1987년의 <제주도 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생각하는 모임에는 현광수 회장과 김민주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고이삼, 문경수, 김중명, 이정미 등 재일 제주인 1세와 2세들 다수가 참여했다.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운동이 많은 진전이 있었고, 1980년대 일본의 재일 한국인 사회에서도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영향이 다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정아영(리츠메이칸대)은 「일본의 4·3사건 추도사업과 재일동포- 2세들의 체험과 사상」²²⁾에서 1980년대의 지문날인 거부운동과 4·3추도운동의 정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980년대에 활발해진 지문날인 거부운동은 일본정부의 외국인 관리제도에 저항했던 운동이며, 민단이나 총련의 통제를 넘어 재일한국인 2, 3세가 중심이 됐던, 주체적으로 추진한 점이 특징이었다. (4·3추도행사에 참여한) 고이삼, 김중명, 오광현, 장정봉, 정아영도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참여했다. 본국 정권을 배경으로 한 민단, 총련 등 기성 민족단체들처럼 위로부터의 통제로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과 연계하면서 시민적 연대에 의해 민족적 권리를 자신의 힘으로 획득하려는 운동방식을 체험하였다. 1990년대 이후 2세들이 중심이 됐던 4·3추도운동은 이런 정신을 확실히 계승하고 있다.”

1988년 4월 추도행사는 한국대사관의 중지 압력도 있었으나, 재일 한국인들이 5백여

22) 정아영, 「일본의 4·3사건 추도사업과 재일동포- 2세들의 체험과 사상」, 『기억의 구술과 역사-4·3의 경험과 재일 제주인, 그리고 한국현대사』 제주4·3 제62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제주4·3연구소, 2010.10.8~10.9, 35쪽

명 참여해 재일 한국인 사회에서 자취를 감췄던 4·3추도행사가 이어지도록 하는 기틀을 놓았다. 재일 제주인 1, 2세들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오사카의 추도행사는 재일 제주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오사카에서 열림에도 불구하고 첫걸음 떼기가 쉽지 않았다. 고이삼의 의뢰를 받은 장정봉이 어렵게 처음으로 오사카에서 4·3추도 강연회를 연 것은 1991년이였다. 김석범과 문경수가 도쿄에서 강연을 왔다. 참가자도 1백 명에 불과했다. 어렵게 이어지던 오사카의 행사가 본격화 된 것은 1997년 <제주도 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오사카>가 문경수, 김중명, 정아영, 장정봉, 오광현, 김성원, 부총사 등이 모여 결성하면서부터였다. <생각하는 모임 오사카>는 1998년 4·3 50주년 행사, '침묵을 넘어'를 재일 제주인들의 한풀이를 위해 제주도 심방을 모시고 실행했다. 이 날 추도회에는 2시간 전부터 1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행사가 시작될 때는 5백 명을 넘어섰다. 이날 절반이 넘는 1세들은 김윤수 심방의 추도곡에 참여해 함께 빌고, 웃고, 울었다. 실로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50주년 추도사업 이후, 도쿄와 오사카에서는 거의 해마다 추도행사가 열렸다. 강연이나 콘서트를 주로 하는 도쿄의 행사에 비해, 제주도 출신자가 많은 오사카에서는 한국계 불교사원인 관음사를 추도장소로 해서 강연과 희생자 추도의식을 함께 거행하곤 했다. 필자가 보기에 일제시기 항일운동이 도쿄는 역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하면, 오사카에서는 재일 조선인(특히 재일 제주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주 항일운동이었다. 오사카는 현장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런 전통이 지금에도 남았나…… 오사카의 4·3추도제에는 지금도 1세들이 많이 모인다.

정아영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세들이 조금 더 역할을 다하여 1세들의 4·3 중압감을 벗겨드리고, 4·3 체험을 우리를 넘어 3, 4세까지도 남겨야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4·3추도사업은 재일 한국인 역사 속에서 4·3의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어야 하고, 일본의 4·3추도의식은 한국이나 제주도의 그것과는 다른 고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후배 세대를 키우는 일은 그토록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인으로서의 귀화가 계속 늘어만 가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후배를 키우고, 그들에게 4·3의 체험을 선물할까? 그리고 어떻게 일본 사회에 4·3의 의미를 올바르게 전파할까?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한문연과 그 사람들>

한문연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 2세들의 모임인 <한국문화연구회>의 줄인 말이다. 재일 2세들이 일본에서 대학에 재학했던 1970~1980년대는 일본 대학 내에서 재일 한국인 민족 동아리 활동이 활발했던 때였다. 리츠메이칸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서승 씨를 정점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고이삼(신간사 대표), 오광현(재오사카4·3유족회 회장), 장정봉, 정아영 등이 그 멤버들이다. 이들은 현재 거개가 50대~60대 초반의 나이이다.

필자가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7년, 일본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였다. 이들과 한국과 제주도 얘기를 나누고, 일본과 일본 내의 4·3운동을 얘기하다 필자는 이들에게서 뭔가 인상적인 공통점을 발견했던 것 같다. 그것은 쉽게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2세로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 막연한 애정? 짝사랑? 같은 것이었는데, 그래서 고국에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신의 일같이 반가워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타까워하는, 필자는 이들에게서 그 같은 살가운 정을 느꼈었다. 그래서 이들 한 분 한 분에게 양해를 구하며 대학 재학시절의 한문연 활동을 묻고, 1980년대의 한국 민주화운동과 일본의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대해 물으며 모두 녹음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럼 이 한문연 사람들은 어떻게 4·3과 접하게 됐을까?

한문연 사람들은 1980년대에 「까마귀의 죽음」을 읽으며 4·3을 어렴풋이 느끼기는 했지만, '4·3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었다'고 들었다 한다. 정아영은 이 상황을,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진전에 깊은 공감을 표명하며 재일동포 사회 속에서 가장 자유주의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대학교의 민족 동아리 안에서 이 정도의 인식이 통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재일 사회에 있어서의 4·3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³⁾고 설명했다.

현재 한문연 사람들이 일본에서의 4·3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문경수의 견해대로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 혹은 5분의 1의 제주인들이 살아가는 일본에서 4·3진상규명운동이 제대로 되어야 바른 진상규명운동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공감한다면, 이들 한문연과 그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되어 고국에 소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제주4·3위원회>에서 1차에서부터 추가신고까지 4회에 걸쳐 4·3 희생자 신고를 받았다. 그 결과 신고인 41명이 희생자 78명을 신고했다. 2007년 12월 말 현재, 재일 한국인 총 59만3,489명 중 제주도 출신자는 9만5,247(16.1%)명이고, 일본으로 귀화한 제주인 약 5만을 합하면 15만 명이 된다 하는데, 추정에 비해 신고인이 너무 적다. 재일 제주인들의 4·3 희생자 신고가 이렇게 적은 주원인은 민단과 총련이라는 이질적인 두 민족단체의 존재 때문으로, 이 양대 세력은 남북 정부에 종속하며 재일 한국인 대다수의 정치생활을 지배해왔다.

4·3은 동아시아 현대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한다. 4·3은 동서냉전의 달갑지 않은 부산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4·3은 정치성을 떨 수밖에 없고, 이데올로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도 결국은 인간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4·3과 재일 제주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정도로 제목해야 할 글을 '4·3과 재일 제주인'으로 그냥 둔다. 욕심으로는 지금까지의 4·3과 재일 한국인, 혹은 재일 제주인 관련 글들을 모두 섭렵하고, 나름대로 평하며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원고 마감 기일을 며칠이나 어기며 제출하려고 보니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양해 바란다.

4·3과 재일 제주인을 생각할 때면 항상 떠오르는 분이 있다. 김시종 선생님이다. 평론가의 말에 따르면 김시종 시인은 일본 문단에서 시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 중 한 분이다. 양심적인 시인으로, 나는 시인의 다음 말들을 항상 기억한다.

…… 4·3 당시 제주시에서 본인 표현 그대로 남로당 말단에서 일하다 1949년 5월 일본으로 건너온 김시종은, 2000년에 처음으로 4·3에 대해 공적 장소에서 발언하며 지금

23) 정아영, 앞의 글, 34쪽

까지의 심정을 토로했다.

“저는 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기억으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해왔죠. 특히 4·3에 관계했던 일은 쓰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선은 제주도라는 제가 자란 곳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곤란함을 초래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조직의 말단 중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려고 했다는 그 ‘도망자 의식’이 심적 부담이 되어, 쓰는 것보다 행동하는 편이 절대적인 사명 같은 것이 되어 우선 행동했죠. 재일조선인운동 같은 것에 말이죠. 그것은 내가 도망쳐 나왔다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속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4·3에 대해서 뭘 쓴다고 해도 변명 같아서, 뭔가 자신이 해온 일을 미화하고 마치 민족의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계속 뿔뿔하지 않은 겁니다. 즉 무엇을 객체화해서 썼다고 해도 자신의 변명 같은 것이 되어 자신이 직접 관련된 것을 떨쳐버린 형태로, 사사로운 관계로 가지 않고 그것 자체가 언어의 빛인 것처럼 하는 것이 좀처럼 되지 않았어요.”²⁴⁾

24) 金石範金時鐘, 『왜 계속 써 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제주대학출판부, 179-180쪽